

국가장학금Ⅱ 폐지 여파… 서울 사립대 등록금 인상 ‘급물살’

사총협-전총협 면담 ‘평행선’
등록금 법정 한도 3.19%에 촉각
고려대·서강대 등 인상안 논의
학생단체 “동결 유지” 반발 확산
교육부 “일괄 동결 한계” 신중론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이후 대학가 등록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가 학부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하며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갖고 등록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학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학생 측은 부담 전가를 우려하며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총협은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지난 2025년 12월 26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제Ⅱ 유형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총협

대넷은 이를 거절하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역할을 해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사립대들은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난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되면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약화돼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총협은 면담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전총협 측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등심위 운영이 보완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사립대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본격가동되면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현실화하고 있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은 최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열린 등심위에서 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육 인프라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의 인상 기류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총협 조사에서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 중’은 39.1%(34개교), ‘동결’은 8.0%(7개교)에 그쳤다. 해당 조사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발표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접점을 찾고 있다. 전총협은 지난

14일 최고진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함께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협의체 마련 △국가장학금Ⅱ 유형 강화 필요 및 인상 억제책 확보 △등심위 위법 운영 제재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사립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 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심위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과 법정 인상 한도 통보 이후 각 대학이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를 본격화하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대책 논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 간 실질적인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주택공급 막는 규제 걷는다”

정부에 맞춤형 제도개선 9건 건의
전세사기 여파에 공급 침체 대응
비아파트 활성화 등 혁신 추진

서울시가 공공주택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이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공공주택 건립 시 심의 통합을”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

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통합심의를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수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방 성능위수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수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 소규모·비아파트 ‘맞춤형 규제 완화’ 요청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숯통을 띄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

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 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전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현진 기자

용인특례시,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협약

산업·경제·문화·관광·교육 교류 확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찌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용인특례시 대표단을 초청해 환영 오찬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던 쩡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대표단과 호찌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은 14일(현지 시간) 다낭 시청에서 호찌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오른쪽)을 만나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다낭시 주요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김경수 “지역 성장동력, 대학·인재가 중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호서대 아산캠퍼스서 특별강연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그 중심에 대학과 인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이 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돼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15일 아산캠퍼스 벤처산학협력관에서 김경수 위원장을 초청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정책

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과 청년, 지역 산업이 나아가야 할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호서대 학생들을 비롯해 동문 가족기업 CEO, 지자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창업 거점 대학’으로서의 호서대 비전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특강 이후 호서대 반도체 패키지 LAB를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시연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해당 LAB은 충남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 시설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대형 재난에도 민방위 사이렌”

호우·산불 등 대피 재난 시 확대
심야에도 사이렌·음성방송 안내

경기도는 앞으로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26.1.5.)에 맞춰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와 초고속산불 등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방위 사이렌은 지진해일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의 공습 대비 등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대형 재난(산불, 풍수해 등) 시에도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역에 589개소의 민방위 경보 단말을

가동해 빈틈없는 경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집중호우나 초고속산불 발생 시, 재난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에게 가장 확실한 대피 신호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된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경보 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난 시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도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음성 방송 내용에 귀를 기울여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